

“새만금잼버리 기반시설 적기 공급을”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최훈열 의원, “대회 부지는 ‘허허벌판’에 가까워” 지적 도교육청에 “새학기 학교현장 혼란 방지·보여주기식 공문서 감축제도 개선해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훈열(부안) 의원은 12일 전북도의회 36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잼버리 대회가 아직 4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 4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전라북도의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이 여타면제



최훈열 의원

사업에 선정되면 새만금 대회 성공개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의 공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3년 완공이 쉽지 않다는 예측이다.

또한, 최근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시작되었지만, 2017년 시작된 남북도

로 1단계 공사의 공진률이 현재 27.7%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회 개최에 맞춰 완공을 위해서는 전북도의 보다 세심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훈열 의원은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는 전북과 새만금의 발전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전북 현안이지만, 현재 잼버리 대회 부지는 허허벌판에 가깝다면서, 부지매립과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 SOC 조기 확충을 위한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새학기 학교현장의 혼란 방지와 보여주기식 공문서 감축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훈열 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3월 개학 첫날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혼란과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 정기인사를 실시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3월 1일자 발령 교사는 개학 전까지 발령 예정 학교에서 업무 수행 권한이 없어, 인수인계는 물론 교육계획 수립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부담은 결국 학생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교원 정기인사 시기의 유연화 방안을 제시하고 새학기 업무경감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국가식품 클러스터 특별법 통과해야”

평화당 조배숙 의원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에 촉구



화, 일자리 창출,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의 체계적·종합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속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조 의원의 설명이

민중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은 12일 국회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개호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같은 시기 타 산업단지의 분양률(포항 블루밸리 분양률 1.8%, 석문산단 23.1%, 광주 빛그린 1.3%, 국가식품클러스터 41%)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 식품시장 규모도 지속 성장 추세이기 때문에 조속히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산업단지의 계획, 조성, 분양 등의 절차 이행에 최소 6년 이상(행정절차 3년, 공사기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2단계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식품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바,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현재 농식품위 계류 중)의 제정 필요성도 빼놓지 않고 주문했다. 특별법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

화, 일자리 창출,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의 체계적·종합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속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조 의원의 설명이

한편, 이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농식품부에서도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익산시와 협의해 2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도출된 결론을 논거로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등 부처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개호 장관은 조 의원이 발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조배숙 의원은 “익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속한 2단계 사업추진과 다양한 육성 지원 방안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익산시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한국당 나경원 “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국회는 ‘이수라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여당 의원들, 강력 항의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로 뒤덮이는 등 이수라장이 됐다. 나 원내대표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하면서다.

이날 10시10분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된 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은 시작부터 박수와 야유가 뒤섞이며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실정 지적에 “맞다” “잘한다”라고 외치거나 손뼉을 치며 호응했고, 여당 의원들은 “물 타기 한다” “여보세요”라고 소리치며 맞섰다.

특히 10시22분께 일제히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원내대표가 안보 불안을 지적하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다.

여당 의원들은 “할 말 안할 말 구분도 못하냐” 등을 외치며 강력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단상으로 올라가 문화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도 “경청하라”고 외치며 맞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용석 정책위의장이 항의하는 홍 원내대표,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사태를 가라앉히려 싸우기도 했다.

문화상 국회의장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계속 발언을 이어가라”고 거듭 말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다함께 “사파해”를 연신 외치는 등 소란이 이어져 나 원내대표는 발언을 이어가지 못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20여 분간 이어진 고성과 야유에 “나가서 마음껏 하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이런 여러분의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로 25분 가까이 이어지던 소란이 겨우 진정되며 나 원내대표는 연설을 이어갔다. 문 의장은 “내가 보기에 상당히 논

란의 발언을 하셨다”라면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타산지적으로 배워야 한다.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게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종적 판단은 국민들이 해 주는 것이다. 청와대 스피커라는 소리가 듣고 의장도 참았다”라며 지난해 소란성대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뉴스

靑 “나경원 발언 강력 유감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항구적 평화 변영 염원 국민들에 대한 모독”

국민들에 대한 모독”

청와대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정주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통령까지 끌어들이 모독하는 것이 흑역사 편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냉전의 그늘을 생존의 근거로 삼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이 아닐까 더더욱 바란다”며 “나라를 위해 싸울 에너지와 국민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낭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변영을 염원하는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뉴스

“원내대표직 사퇴를”… 與, 나경원 성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것을 두고 강력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가 원수 모독죄’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공언했다.

이 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지난번 한국당 3명의 의원들이 5·18 망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데 이어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발언을 들으면서 분노도 생기고 답답하기도 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도를 넘은 것을 떠나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었

다”며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나 원내대표가 그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법 146조에 따라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가원수가 해외에 나가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을 하고 있을 때 집안에서 국가원수를 모욕한 전례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나 원내대표는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법관 탄핵에 대해서 언급했다”며 “법관 탄핵 명단을 공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현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선험적으로 규정하고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다. 절대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내에서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당 등을 강화해서 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

“권력기관 개혁 진영 문제 아냐”

조국靑 민정수석 공수처·국정원법 등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12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며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조 수석은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당정협력을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수자원공사 나운동 군산가압장 공원화

바른미래 김관영 의원 “도시 생태공원화 지역민 기대 부응”

10년째 방치돼 민원이 적지 않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군산가압장이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주 수공으로부터 이러한 확정 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수공은 약 2~3억원 가량을 투입해 시설물 안전 확보 및 환경정비를 할 예정이며, 향후 해당 시설을 시민에 개방해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수공의 결정 직후에 김 의원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군산가압시설의 공원화는 수년째 논의가 있었으나 수익원이 투입되는 공원조성 사업비와 매년 4천 만원을 달하는 사용료 문제로 수공과 군산시가 평행선을 그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자원 공사 사장과 최근 논의를 해 ‘선 환경 정비, 후 사용료 논의’라는 결단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촌 한복판에 위치한 군산가압장은 1985년 운영을 시작한 수압 상승 시설로 대지 약 4천 평에 달

하는 시설이다. 지난 2007년 가동을 중단한 후 10년 이상 사실 상 방치된 가운데 미관은 물론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방을 추진하고 공원화 조성 작업만으로도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해소된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공약적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군산 시민의 민원을 귀담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약적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군산 시민의 민원을 귀담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국가교육위 설치법 이달 중 발의

이르면 하반기 출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르면 하반기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뒤 관련 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하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모델이다. 유·초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이관된다.

조성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국가교육위 설치 추진 방안과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식·조정관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와 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협력적 교육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설치법안 대표발의자인 조승달 의원은 “곧 법안을 발의하면 다음달 10

일 전후로 교육위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공청회 과정을 통해 우려되는 여러 지점은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당정청 협의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우리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도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다”며 “지난 산업화 시대 교육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로, 표준화·객관화된 지식전달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했다. 기존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개편되는 미래 교육 거버넌스는 국가교육위, 시도 교육청, 교육부, 학교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 수립에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